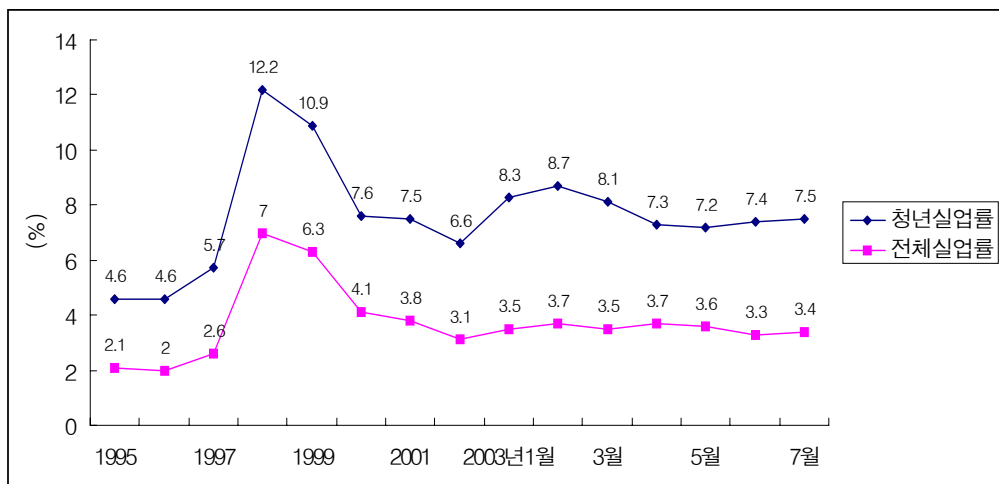


고학력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

청년실업의 현황

-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으나,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2003년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7.5%로 전체 실업률 3.4%의 2배 이상
 -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‘취업준비’ 및 ‘특별한 이유 없이 쉬’ 등을 실업으로 간주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4%를 상회함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 인구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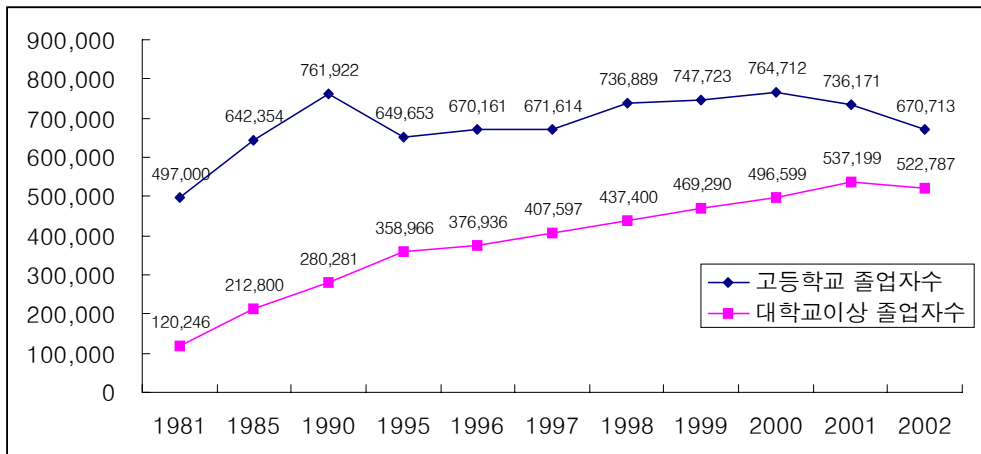
[그림1]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추이

-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고학력 젊은 여성의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
 - 청년실업 중에서 고졸자의 실업 비중이 줄고, 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
 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8년 47.0%, 2002년 49.1%로 꾸준히 상

승한 결과,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1998년 18.9%에서 2003년 2월 36.8%로 급증

청년실업의 원인

-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음
 - 경기적 요인은 경제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신규채용의 감소에 기인함
 - 구조적 요인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, 노동시장의 경직화, 청년층의 직업의식의 부재 및 반기업 정서 그리고 대기업의 규제 등에 기인함
-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
 - 대졸자 수는 1983년 16만 7천명에서 2002년 55만 2천명으로 20년만에 3.3배 증가([그림 3]참조)
 - 대학 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맞게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어려움



자료 : 통계청

[그림2] 학교별 졸업자 추이

-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대학교육이 산업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은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음

○ 노동시장의 경직성

-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졸업자 채용시 임금압박이 작용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제가 제한규제 및 노조반발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,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음

○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

- 청년들의 '편하고 쉬운 일'에 대한 선호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공존하고 있고, 특히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추세임

[표 1]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 및 부족인원 (단위: 명, %)

	사무관리	전문가	기술 및 준전문가	기능직	단순노무	서비스직	판매관리	전체
부족인원	17,224	7,333	17,252	72,987	83,768	527	5,862	204,951
부족률	4.1	9.3	9.1	10.8	11.6	3.0	6.8	9.4

자료 : 중소기업청, 2002년 9월 26일 보도자료 중소기업 인력부족 여전히 심각

-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치열한 자기개발과 현장경험에 대해서 소극적임

○ 기업하기 힘든 환경

- 기업의 인상에 대한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

(60%)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(대한상의·중앙일보, 경제·기업 국민의식 조사 결과)

- 이윤추구 주체인 기업에 대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 규제가 만들어지는 등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

청년실업 대책

- 청년실업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,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이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 - 따라서 고학력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,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
-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함
 -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중등교육,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교육체제와 학과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혁
 - 인구의 자연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수요자 주도에서 공급자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, 2004년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함
-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
 -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야 함
 - 이를 위해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임금관련 법제를 개선하고, 정규직 보호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함

-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
 -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시스템(Job Outlook System)을 개발
-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
- 시장경제 및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출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함
 -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함
 - 또한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함
 -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감안하여 투명성제고,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함
- 정부부처간 상호협조
- 이상의 청년실업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재정경제부, 교육인적자원부, 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상호 협조해야 함

박성준 ·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
psj@keri.org